막오른 총선…역대급 깜깜이 선거 눈치싸움 '치열'

선거구 획정 지연 출마자 고심
비례대표 배분 방식도 미확정
민주, 공천 적격심사도 늦어져
국힘, 미확정 선거구 내부 조율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2일 예비후보등록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지만 선거구 획정, 선거제도 등이 정해지지 않아 광주·전남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출마예정자들간 눈치싸움이 한창이다.

12일 오후 6시 기준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지역 후보자 등록이 중앙시스템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료된 건 수는 31명에 불과하다. 각각 광주 16건, 전남 15건 등이다. 예상보다 적은 예비후보자 등록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적격심사가 늦어진 게 원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주부터 공천 적격 심사 판정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시기상 촉박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출마예정자는 "지난주부터 당이 서류를 심사하고 오늘 내일(13일)중으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며 "그런데 서류가 전국적으로 몰리면서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다. 이번에 공천 적격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천 적격 심사 판정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출마예정자들의 예비후보 등록 러시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기준, 국민의힘 역시 예비후보등록이 저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확정되지 않은 선거구 획정이 원인으로 손꼽힌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 따르면 전남지역 10개의 선거구 중 8개의 선거구가 분구되거나 합구되는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남의 국민의힘 입지자들도 선거구 안에 따라 지역구를 조정하는 등 분주한 모양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은 "전남지역은 바뀐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후보들이 출마를 조율하고 있다"며 "영광담양함평장성을 제외한 전 지역구에 후보들을 내겠지만 이달 말까지는 내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진보당의 총선 출마예정자 6명은 전날 출마기자회견과 함께 이날 동시 후보등록을 마치고 곧바로 선거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의 선거제 개편 작업이 끝나지 않은 것도 출마예정자들의 고심을 깊어지게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과 위성정당 방지 여부에 대해 합의안을 여전히 도출하지 못하면서 출마예정자들은 지역구냐, 비례대표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각 지역의 출마예정자들은 매번 반복되는 '깜깜이 선거'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도 영암무안신안 출마예정자는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 등 어느 것 하나 정해져있지 않은 상황이다"며 "국회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구 획정은 13개월 전에 하는 것이 법인데 안타깝다.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양당제의 폐해에 따른 것으로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광주역~송정역 셔틀열차 17일 운행 종료

안전성 문제 연장 운행 불가
"시내버스 등 대체 교통 충분"

지난 2016년부터 7년여간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오가던 광주선 셔틀열차.
광주시 제공

7년여간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오가던 광주선 셔틀열차가 오는 17일을 마지막으로 운행을 종료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부터 KTX의 광주역 미진입에 따른 고속열차의 환승편의를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오가는 광주선 셔틀열차를 운행했다

해당 셔틀열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엔진의 CDC(Commuter Diesel Car)이며, 특히 통근열차로 분류돼 이용요금이 1000원으로, 열차 종류 중 가장 저렴하다.

또 광주역~극락강역~광주송정역 14㎞ 구간을 15분 만에 연결해주는데다 그 어떤 교통수단보다 빠르고, 하루 30회 왕복 운행되면서 정시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

이런 셔틀열차의 운행이 중단된 것은 비용 때문이다. 광주선 셔틀열차는 광주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협약을 통해 위탁방식으로 운행했다. 코레일이 열차운행을 맡고, 광주시는 매년 15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형태다.

그러나 168석 규모의 셔틀열차의 1회 평균 탑승객이 20명 미만으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면서 저효율·고비용의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광주시의회 등에서 끊임없이 지적을 받았다.

실제 지난 2022년과 2023년 시의회의 반대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9월, 코레일 측에서 12월 18일부터 셔틀열차 운행 종료를 통보했다.

△셔틀열차 이용객 저조(1회 평균 18명) △시내버스 등 대체교통수단 충분 △CDC 폐차 등이 이유다. 특히 현재 운행중인 CDC열차는 내구연한(25년)을 초과해 안전성 문제로 연장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셔틀열차 지속 운행을 위해 국토부, 코레일과 수십차례 협의를 통해 CDC 연장 운행 또는 누리로, 신형열차(EMU-150) 등 대체열차 투입을 요청했지만 '투입 가능한 열차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광주시는 다른 대체수단으로 요청한 누리로(전동차)는 광주지역에 차량정비 시설이 없는 데다 차량 여분도 없어 투입이 불가능하고, 신형 EMU-150(전동차)는 대체투입할 경우 이용요금 상승(1000→4800원)과 운영비 부담이 4배 이상(15억→60억원) 증가해 사실상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시철도 1호선 열차를 개조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경우 1호선 전동차에 적용된 직류(DC) 방식을 교류(AC)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개조비용이 100억원 이상 소요되며, 열차 개조에 따른 국토부 승인도 불확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셔틀열차 운행과 관련 '광주역~광주송정역 구간의 교통수단은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종료를 결정했다.

현재 시내버스 좌석02번, 송정19, 송정98 등이 운행되고 있고, 광주역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양동시장역 등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이동해 지하철을 이용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26년 도시철도 2호선 1단계가 완공되면, 광주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노병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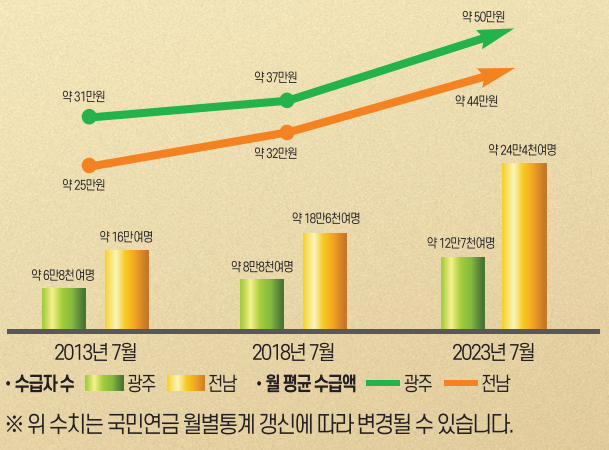
꼬마 천사들의 저금통 기부 광주 북구 매곡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코리아유치원 아이들이 12일 북구 매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송년나눔을 위한 사랑의 동전모금함 개봉식에서 1년간 모은 우유팩 저금통을 개봉하고 있다. 올해로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랑의 동전나눔 행사의 모금액은 지역 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정이다. **나건호 기자**

NPS 국민연금공단 National Pension Service

최근 1년 광주·전남지역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수급액 (2022년 8월~2023년 7월)

- **광주** : 총 9천 8백여명/월 평균 연금액 : 약 67만원 • **전남** : 총 1만 5천여명/월 평균 연금액 : 약 62만원
- **광주** : 누적 약 50만원▸최근 1년 67만원, **약 17만원↑** • **전남** : 누적 약 44만원▸최근 1년 62만원, **약 18만원↑**

■ 광주·전남지역 국민연금 누적 노령연금 통계



※ 위 수치는 국민연금 월별통계 갱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급액은 올라가고
수급자는 많아지고

우리는 지역주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전남 지사 직원 일동

행복 쑥
만족 쑥쑥
국민연금공단이
더 큰 만족을 드립니다